



4호 2006년 7월 8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7월 12일

한미FTA 반대

집회로 결집하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린다.

1차 협상은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협상으로 17개 분야 중 13개 분야에서 통합 협정문 초안이 작성될 정도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한미 양국의 협상 당사자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한다.

서울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1차 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가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분야의 한미FTA 1차 협상: 그 거짓말과 진실》, 우석균)

MBC ‘PD수첩’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한미FTA와 황우석 사태는 닮은꼴”이다. 다시 말해 열우당 정부의 대사가극이다.

2차 협상도 1차 협상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관측이 많



다. 9월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다는 것도 불길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큰 합의의 틀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협정이 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FTA 반대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들에 맞선 투쟁이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포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항이 조직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NAFTA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각될 수 있었다.

항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

부’(이하 ‘범국민’)는 2차 서울 협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7월 12일 한미FTA 반대 투쟁은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정치 집회가 될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범국민’은 7월 12일 투쟁의 과녁을 협상장으로 맞추고 있지 않다. ‘다함께’, ‘보건단체연합’, ‘노동자의 힘’, ‘전진’ 등이 시위 대열이 협상장으로 향할 것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광화문으로 결정됐다.

협상장을 봉쇄하거나 에워싸 협상 좌절 또는 방해를 시도하는 것은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 이래 반신자유주의 동원의 중요한 투쟁 전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 아셈 반대 시위, 2004년 반WEF 시위, 2005년 아펙 반대 시위 때 그렇게 했다.

노무현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정부의 촉수가 향해 있을 협상장 주변의 대규모 시위다. 협상장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위는 다소 맥빠진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7월 12일 시위는 중요하다. 앞으로 벌어질 FTA를 둘러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

일시: 7월 12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 광화문

주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www.nofta.or.kr](http://www.nofta.or.kr))

한국 최대의 진보 포럼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기간: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다함께  
참가신청: 전화 02-2271-2395 인터넷 신청 [www.marxism.or.kr](http://www.marxism.or.kr)



## 인용해도 될까요?

“정 회장은 폐렴과 협심증이 의심되고 심근경색과 돌연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며 협박해 보석을 받아낸 정몽구 변호인단

조우현 교수: “[이번 위원회]가 절묘하게 구성됐다.”

김근태: “삼성만 빠졌나? 그럼 진대제 장관만 데려오면 되겠네.”

– 전 현대차 사장 이계안을 비서실장으로, 전 LG CNS 사장 오해전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좋아하는 김근태

“강남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지만 부동산 폭등 덕을 본 것은 강남 부유층이고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들의 입지는 현 정권 들어 재규축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자기편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승리하게 만드는 ‘X맨’ 역할을 하고 있는 셈”

–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회장 재판 시간에 현대차 노조는 파업 … 정몽구 회장의 건강 악화설이 나오는데도 파업을 강행한 노조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한국경제신문〉의 황당무계한 논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 …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입증한 놀라운 투지와 정신력을 노동자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들과 일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

– 월 스트리트 자본가들에게 한국 노동력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이용득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

– ‘비정규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검찰 관계자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가 낳은 대형 급식 사고

급식은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사고가 2.8배나 높았다. 위탁업체들은 영양사나 조리사 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급식비 중 50퍼센트 정도만을 음식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질 낮은 재료를 쓰기 쉽다. 또 식품안전에 써야 할 돈을 입찰을 따기 위한 뇌물로 쓰기도 했다.

## 뇌물

이번 직영 전환 결정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벌여 온 운동의 성과다. 그와 동시에, 식품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식사고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식품 관련 규제가 1백 건이 폐지됐고 67건의 기준이 완화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식품 위생과 안전의 근간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8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 검수 체계를 통합해 관리하자는 식품안전기본법 도입을 미뤄 왔다. 게다가 한미FTA 협상에서 보듯이 광우병 소 수입, 원산지·GMO 표시 금지 등 검역 체계 약화를 추진하며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식중독 사건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한미FTA 반대 운동 등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줬다.

강동훈

식품안전보다 이윤이 우선인 체제의 희생자가 된 우리 아이들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위탁급식은 김대중 정부가 중·고등학교 급식을 확대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03년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에서는 중·고등학교의 95퍼센트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이다 보니 위탁

## 선거법 발미 경찰의 ‘다함께’ 탄압

## 소환대상자들, 경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하다

경찰은 〈맞불〉의 전신 〈다함께〉가 지방선거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 도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23일, 두 명의 ‘다함께’ 활동가들에게 6월 30일을 시한으로 하는 3차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진정한 언론 탄압이다.

출두요구를 받고 있는 ‘다함께’ 회원들은 단호하게 출두를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중지(수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만약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까지 된다면 의연하고 강력한 법정투쟁을 벌일 것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근거인 ‘선거법 93조’ 자체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발미로 한 경찰의 ‘다함께’ 탄

압은 우리 운동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당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항의 여론의 압력 때문에 경찰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

마포경찰서는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

한규한

## 고려대 당국의 “전쟁과 혁명의 시대” 불허를 규탄한다

‘다함께’는 진보포럼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2002년부터 고려대에서 개최해 왔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저명한 진보 인사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고려대 당국은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총학생회 집행부와 ‘다함께’ 고려대 회원이 고려대 학생지원부를 찾아가 불허 조치에 항의했지만, 고려대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6월 29일 ‘다함께’ 고려대 회원들과 사범대 학생회 등이 장소 불허 문제를 놓고 고려대 학생지원부에 다시 항의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학생지원부는 “교육

기관에서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행사는 다함께가 하는 것인데 … 출교자들이 학교에 사과하고 천막 철거하면 [장소 협조가] 잘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속내를 털어냈다.

고려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사상 검열이다. 급진적 주장과 토론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고려대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파 인사들을 불러 강연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의 독재자였던 리관유를 초청했고, 〈고대신문〉을

통해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초청했다. 그리고 올해 한 사회학과 교수가 강금실 당시 서울시장 후보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고려대 당국은 우파가 주최하는 ‘외부행사’는 허용했다. 올해 5월 1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는 고려대에서 대표적인 뉴라이트 지식인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를 불러 한국현대사를 주제로 강연회를 했는데, 고려대 당국은 이 ‘외부행사’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대가 민주노동당 의원과 진보적 교수 등이 강연하는 “전쟁과 혁

명의 시대”에 대해 유독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중잣대다. 고려대는 또한 학내 단체인 고려대 시설관리노조의 강의실 대여도 불허했다.

따라서 고려대가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불허한 것은 단지 ‘다함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적 학생들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고려대의 사상검열과 자치권 탄압에 함께 항의해야 한다.

김영익

7월 14~17일 열리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장소는 경희대로 바뀌었습니다.

## 단일전선체 논쟁 ② 단일전선체와 민주노동당

# 전선은 대중투쟁, 당은 의회활동?

김하영

요즘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전국 순회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단일전선체 건설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제출된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은 A4 한 장 정도로, 분량뿐 아니라 논란의 소지도 최소화한 듯한 싱거운 문서처럼 보인다.

단일전선체 문제가 당 내에서 거의 처음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전선체 건설에 담긴 정치적 함의(와 문제)를 되도록 알리지 않고 토론을 이끌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은근슬쩍 두루뭇실 일을 진행시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단일전선체는 민주노동당의 성격, 집권 전략 등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단일전선체 건설 문제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안건이 아니라 단지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질 예정이라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 당과 공동전선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동당은 단일전선체에 참가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오해 방지를 위해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공동전선을 통해 다른 세력들과 연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반대, 팽택 미군기지 반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확대 반대 등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공동전선 안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NGO, 민중단체, 급진좌파, 소규모 서클 등과 함께 투쟁하면서 그 속에서 지지를 넓히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공동 투쟁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가령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아직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설득할 수 있다. 또,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지도하려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만 아직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일전선체를 통해 “당 대중기반 확대”<sup>1)</sup>를 꾀하겠다는 것은 일확천금식 사고다. 민주노총, 전농 같은 대중단체들이 죽 이름을 내건 단일전선체의 일부가 된다고 해서 그 소속 회원들로부터 실질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장’은 단일전선체가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일전선체가 정치 강령의 통일을 추구하는 바람에, 특정 쟁점과 요구를 위해 건설된 공동전선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장’은 단일전선체가 “높은 수준의 단일한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자민통 경향 동지들이 오랫동안 의미 부여를 해 온 것과도 배치되는 설명이다. 이미 5년 전에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단일전선체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민족민주전선체는 느슨한 수준의 대중운동연합체나 공동투쟁체가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강령적[자민통 강령] 기치 아래 각계각층을 하나의 힘으로 결속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이끌어야 할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정치전선체이다.”<sup>2)</sup>

### 역할 분담

‘입장’은 단일전선체와 민주노동당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를 비켜갔는데, 그것은 이른바 대중투쟁과 의회활동 역할분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노동당은 원내 활동에 주력하고, 대중투쟁은 단일전선체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원내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운동권 정당 비판론’, ‘정책정당론’ 등과도 맥이 닿는다.

“민주노동당이 중소규모의 대중행동 전에 일상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sup>3)</sup>, “당이 아무 때나 이른바 장외투쟁을 벌이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운동권당’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다”<sup>4)</sup>는 것이 역할분담론의 기본 발상이다.

“당은 그 특성상 원내활동에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 당을 무슨 대중투쟁기구처럼 사고하는 경향은 당의 고유한 역할과 성격을 무시하

민주노동당 자체가 대중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는 것[이다.]”<sup>5)</sup>

하지만 원내 활동만으로 집권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당 홀로 집권을 위한 모든 정치활동을 도맡아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해야 한다. … 대중단체연합체가 대중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sup>6)</sup>

이런 입장은 얼핏 대중투쟁과 의회활동의 절묘한 결합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활동 전담 기구로의 전략이다.

의회활동은 노동자 정당이 해야 할 여러 활동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9명뿐인 민주노동당의 현실에서 당 활동이 의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원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동맹을 전제로 한 발상이다.

### 오해?

‘입장’은 “상설연대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독자성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오해가 당내외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가 아니다. 단일전선체가 “단일한 지도집행체계”를 갖출 것이고, 이 “지도집행체계의 의사결정사항들을 모든 소속단체와 개인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규율”<sup>7)</sup>이 필요하다고 그 동안 여러 자민통 이론가들이 강조했다.

더욱이, 단일전선체가 “전략적 통일전선체”로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급계층”의 “최소수준의 공통적 요구를 중심으로”<sup>8)</sup> 실천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연합세력들이 합의한 최소공배수를 대중투쟁이 넘어설 것 같으면 그 운동은 집권을

위한 단결에 방해가 된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적 당이 돼야 한다는 주장, 즉 단일전선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나오고 있다. “노동운동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정당,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맨 앞에 놓고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sup>9)</sup>

민주노동당 강령 변경 압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요소를 극복하고 전체 민중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강령으로 대체하여야 한다.”<sup>10)</sup>

사실, 자민통 경향의 다수는 처음에 민주노동당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계각층의 진보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되지 못하고 협소한 계급정당”<sup>11)</sup>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심지어는 “노동계급의 독자정당”이라는 “좌경적 오류”로 민주노동당을 평가하기도 한다.<sup>12)</sup>

그래서 자민통 경향들은 민주노동당에 들어온 뒤에도 민주노동당을 민족민주정당 성격으로 “재창당”하거나 “혁신 강화”하려 해왔다. 이런 기류는 지방선거 평가를 둘러싸고도 “대중정당화”(큰 규모의 정당이라는 정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정당이라는 완곡어법적 의미) 주장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단일전선체 주창자들은 지금으로선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투쟁적 당원들이 단일전선체가 적당한 때 추진하려는 계급 연합, 노동자 투쟁에 족쇄를 채울 계급 협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다.

- 1)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동당 입장.
- 2) 정대연, ‘9월테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 36호, 50쪽.
- 3) 최미란,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 4) 정대연, 민중연대 조직발전을 위한 1차 토론회 자료집.
- 5) 이용대, 민주노동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 6) 박경순, 진보적 대중정당을 혁신 강화하자.
- 7) 박경순,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
- 8)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민주노동당 입장.
- 9) 박경순, 노동운동을 혁신 강화하자.
- 10) 최미란, 앞의 글.
- 11) 정대연, ‘9월테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민》 36호, 53쪽.
- 12) 한호석, 사회변혁운동과 노동계급의 임무.

함께 읽을 소책자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계급연합 전략 비판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 계급연합 전략 비판

김하영 지음

2,000원

# 한미FTA의 대안

[편집자 <맛불> 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맛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견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라고 비판한다.

정태인의 비판은 지배자들 사이에서 내분을 일으켜 우리 운동에 자신감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태인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는 유럽이나 중국과 FTA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는 한 · 싱가포르FTA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폭로해서 한미FTA 반대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대안은 위험하다.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가 각 업종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며 "한미FTA가 가져다 줄 여러 재정적 효과 가운데 으뜸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낯선 식민지>)

미국에 맞서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한미FTA 협상을 "매국협상"이라고 부르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매관판료"와 삼성 · LG · 현대 같은 초국적 자본이 나머지 집단의 이익을 미국에 팔아넘긴다는 주장은 실제 현실과 다르다.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하청계열화돼 있는 중소기업 등 대다수 한국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이윤 추구의 계기로 여겨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국가 강화 대안은 잘못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미FTA를 주로 주권의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정부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하거나 '민족자본',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 자본 분파와의 협력을 조장해 계급 연합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

한미FTA는 '외부 충격 효과'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개혁(구조조정)을 목표로 삼는다. '민중적' 또는 '자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국익 · 국민경제 · 주권강화라는 견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대안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제물로 만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지역주의적 대안

둘째는 지역주의적 대안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한미FTA에 맞서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태인은 한중FTA가 미국과의 FTA보다 강도가 낮은 FTA가 될 거라는 환상을 유포한다. 좌파민족주의경향 내에서도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미국의 패권을 막자는 주장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의 FTA에 반대하는 주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한테 가끔 으르렁거리도 제국주의 국가이기는 마찬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체 출판물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에서 "자주적 세계화"의 모범 사례로 중국을 들며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백만 명을 감원하는 과단성을 보여 주었다"고 칭찬했다. 중국과의 FTA는 바로 그런 과단성을 한국에서도 강요할 노동자 · 민중 착취 협정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동북아 민중을 서로 경쟁적으로 착취하는 효과를 낼 자유무역협정이 동북아경제공동체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가 그런 경제공동체를 지지해야 할까? 우리는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처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지역화의 대표 주자들이 부분으로든 전면으로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중무역협정

셋째 대안은 민중무역협정이다. 민중무역협정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한미FTA 반대 투쟁은 주권 ·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무제한적 시장화에 맞선 국제적 연대 투쟁의 관점에서 서야 한다

의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BA:알바)의 일부이며, 현재 민중무역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 · 쿠바 등 세 나라다.

민중무역협정에는 지지할 내용이 많다.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가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점이나 물과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가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선언도 백 번 옳다.

특히, 경쟁과 착취보다는 연대와 상호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는 민중무역협정의 기본 정신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민중무역협정은 약정도 함께 갖고 있다. 민중무역협정이 그 지역의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보

호무역주의를 민중무역협정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그 일환으로 볼리비아에서는 '볼리비아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민중무역협정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국적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국산품 애용 운동, 중소기업 육성책 등은 볼리비아 내의 계급 갈등을 부차화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기업주들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마비시킬 수도 있다.

국제 연대

한미FTA 반대 운동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FTA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 자본의 세

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이다. 국제주의는 추상적인 덕목이나 상식이 아니다. FTA는 각국의 노동자한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는 자본가들의 압력을 뜻한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직후부터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았다. 실제로, NAFTA가 체결되고 1년 뒤 미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당시 하원의장 길리치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임금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미국 대 한국이라는 국가(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FTA라는 이윤의 권리장전을 폐기처분하려는 국제적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FTA 반대는 '쇄국'이라고 낙인찍는다. 이 정부에게 우리는 노동자한테 이윤을 국제 노동 기준을 수입하는 것은 왜 안 되냐고 주장해야 한다. 유전자조작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도, 기업한테만 유리한 투자장벽 철폐를 강요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자유 이동은 왜 규제하냐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물 사유화를 막고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한 볼리비아의 사례와 경험을 배우고 '수입'하기를 원한다.

국제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 · 민중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무역은 자본가들에게만 이로운 무역 질서 때문에 고통을 입는 대다수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면 상황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은 국가(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쌀과 영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 · 전기 · 가스 등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반대 입장에서 한미FTA 반대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김어진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케인스주의인가, '21세기 사회주의'인가?

요즘 세계 진보진영의 화두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제창한 '21세기 사회주의'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진보진영 상당수는 아직도 지난 세기 말에 득세했던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NL이다 PD다 하면서 한국 사회 혁명의 전략 · 전술을 놓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이렇다 할 '과거사 청산'도 없이 시장경제 지지자가 돼, '협력적 자본주의'나 '개방적 민족경제'나 '사회적 시장경제'나, '분배에 기초한 성장'이니 하는,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 주장들을 펴고 있다.

이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함께 묶어 주는 공통분모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는 점,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정한다는 점, 대안으로 모종의 케인스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 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이들 중 90퍼센트 이상이 이제 모종의 ('개혁적', '포스트', 또는 '좌파') 케인스주의로 넘어갔다. 이들과 노무현의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경계는 모호하다.

필자처럼 박정희 시대에 맑스주의에 입문했던 세대에게 케인스주의는 대안이 아니라 박정희의 군부독재와 함께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당시 주류경제학의 표준적 교과서가 케인스주의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인스 경제학은 부르주아 경제학 그 자체였다.

이 때문에 요즘 진보진영 상당수 인사들이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 사이에 마치 만리장성이라도 놓여 있는 듯이 케인스 경제학을 진보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

이처럼 진보진영이 케인스주의로 경도한 것은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나라 진보진영의 스탈린주의적 뿌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1930년대 후반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은 반파시즘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하면서 각국 공산당에 케인스 경제학과 같은 개량주의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이들과 연합하도록 지령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통 맑스주의 경제학자로 잘못 알려져 있는 스탈린주의 경제학자 모리스 돌이 당시 케인스 비판을 자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필수성을 신봉한다는 점에서, 또 국가의 중립성과 국가의 강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케인스주의는

시장의 초월과 국가의 폐지를 지향하는 맑스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케인스주의는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거부하고, 신고전파 가격이론을 수용하고, 공황의 필연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와 근본에서 다르다.

또, 케인스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 제기한 비판들, 예컨대 '세이의 법칙'에 대한 비판이나 화폐수량설 비판은 맑스가 이미 더 철저하게 제기한 바 있다. 좌파 케인스주의자들이 애호하는 '금리생 활력적 자본주의'나 '투자의 사회화' 같은 케인스의 명제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지 혁명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런 케인스의 주장이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언뜻 보기에 급진적 반자본주의 주장이 저명한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조셉 스티글리츠의 비판이 주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오늘날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 통제, 복지 지출 증대와 같은 개혁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인스주의의 주요한 성취로 주장되는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는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적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격화된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계급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배계급의 무마적 대응의 산물이다.

케인스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이라는 문제설정, 즉 '좋은'(또는 '덜 나쁜') 자본주의(= '스웨덴 모델')와 '나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분법이다.

케인스주의에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자본주의 운동이 케인스주의와 무원칙하게 동맹할 경우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운동에 현실성이 더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외 대안 부재'론의 문제설정, 즉 시장 논리, 경쟁력 논리, 성장 담론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해 자본주의 해체모니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케인스주의는 20세기 중엽,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 국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고안돼 적용됐던 지배계급의 대응 전략이다. 게다가 지난 1970년대 이후 약발이 다 떨어진 지배계급 스스로 용도 폐기 처분했다.

이것을 21세기에 우파도 아닌 좌파가 자신의 대안이라고 다시 부여잡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성진 교수는 맑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마르크스와 한국경제>(책갈피)의 저자이고, <마르크스의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등의 역자이다.



주간 <맛불>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진 신문인 <다함께>가 주간 <맛불>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더더욱 각별한 것이 '윈디시티'의 멤버 중 반 이상이 '다함께'의 회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피폐한 시스템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맛불>을 꼭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반장(소울 부갈루 밴드 윈디시티 드럼&보컬)

새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박인규(프레스인) 대표 지음 2,000원

이 소책자도 함께 읽으시오



명분 없는 미국의 이란 공격

조지 퀼러워 지음 김용민 옮김 2,000원

## 다함께의 기본 입장

###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현대차 노동자 투쟁이 가야 할 길

비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마구잡이로 잘도 구속하던 사법부는 정몽구를 풀어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여실히 보여 줬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1백여 명은 6월 말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해 파업 사수 집회도 열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지침을 내려 연대하고 있다.

최근 정규직 조합원 총회에서는 72.6퍼센트의 찬성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통과됐다. 비정규직 노조 또한 97.46퍼센트의 찬성으로 산별을 가결시켰다.

진정한 산별노조의 정신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과 단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우는 게 산별 전환

### 외대 노동자 투쟁

##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대 노조의 파업이 세 달째 접어드는데도 학교는 탄압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 6월 26일, 총무처장과 용인캠퍼스 학생처장은 “개새끼”, “쫓빼리”, “쌍년” 등 욕설들을 내뱉으며 남성 조합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고, 여성 조합원의 머리채를 흔들었다. 이런 ‘막가는’ 자들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다.

외대의 진보적 학생회장들과 학내 단체들은 학교의 부당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도 학교의 노조 탄압을 지지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

대위)가 꾸려졌다. 공대위는 단병호·심상정 국회의원, 홍세화 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함께 등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다.

6월 29일 출범한 공대위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폭력, 성희롱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파 총학생회 집행부들이 공대위 대표들을 막아서며 학교를 두둔하는 추태를 부렸지만, 공대위 구성원들은 이들을 단호히 뿌리치고 이사장과 항의 면담을 했다.

공대위는 7월 3일 교육부 앞에서 학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명훈

## 기업주들의 ‘영웅’이 된 배신자 이용득

한국노총 지도부의 우경화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위원장 이용득이 월스트리트까지 날아가 외자 유치 도우미로 나서 한국 노동운동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

이용득은 월스트리트의 기업주들 앞에서 “노사 문제 때문에 한국 투자를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을 모두 털어버려라”, “노사 문제가 생기면 한국노

총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야청을 떨었다. 민주노동당의 말처럼 “노동위원장이인지 경총위원장이인지 알 수 없는 행보”에 <조선일보>는 “영웅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라며 칭송했다.

이용득은 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주특기인 외국자본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의 진정한 의미다. 이번 파업부터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의 모범을 보여 줘야 한다.

지난해 류기혁 열사 투쟁 때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점에서 지난 6월 12일 정규직 노조 3공장 대의원회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합의해 준 것은 노동자 연대를 외면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 된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구속노동자들

구속노동자들이 노무현 정권의 탄압과 만행을 규탄하고,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7월 3일부터 옥중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박정훈 지회장,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조직부장, 유성기업노조 엄기준 동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박해욱 전위원장, 최석영 동지, 이문희 동지, 강상규 동지, 금강화섬노조 박태규 동지가 그들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분쇄, 특수고용직 노조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다. 또한 수많은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안 요구 사항들을 함께 내걸고 있다. 아울러 7월 12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끝간 데 없는 착취와 탄압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에 펼쳐 일어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6월 30일 현재 감옥에 있는 구속 노동자들은 모두 50명이며 상황이 공유되는 대로 옥중투쟁 노동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창하

한때 한국노총 ‘개혁파’였던 이용득은 이제 ‘보수파’와 전혀 구분이 안 된다. 정부·자본과 유착해 투쟁을 배신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민주노총으로 조합원들을 뺀 것이 보수파들의 말로였다. 배신자들의 앞길에는 저주만이 있을 뿐이다. 전지윤

기타 노동운동의 쟁점(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쌍용차 노조 간부 비리, 산별 전환 투표 가결)은 <http://www.counterfire.or.kr/2060703.htm>을 보시오.

### 정기 구독하십시오



짚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짚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멕시코 대선

# 침예한 양극화를 보여 주다

6월 26일 톨루코에서 유세하는 오브라도르

7월 2일 실시된 멕시코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1위와 2위의 득표를 격차가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박빙 접전 때문이다.

중도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민주혁명당(이하 PRD)의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이하 PAN)의 후보 펠리페 칼데론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가 몇 달을 끌 수도 있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다(파이낸셜 타임스> 7월 3일치).

이런 초박빙 승부는 멕시코의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 준다.

선거운동 기간에 주류 언론은 오브라도르를 “급진 좌파”라고 공격했다. 그가 “빈민 먼저”를 외치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우파들은 오브라도르가 “제2의 차베스”라고 떠들어대며 그가 당선하면 멕시코에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긴장 전략’을 통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했다.

예컨대, 지난 4월 PAN 정부는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중인 철강 노동자들에게 군경을 투입해 두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또, 5월 초에는 멕시코 시티 인근 도시에서 경찰이 노점상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했다.

## 제2의 차베스?

한편, 오브라도르의 공약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공약과 비슷하다. 물론 더 많은 이유를 위해 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복지를 축소해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신자유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멕시코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브라도르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 사회운동의 많은 활동가들이 우파를 타격하기 위해 중도좌파인 오브라도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브라도르가 급진 좌파인 것은 아니다. 멕시코의 한 언론은 오브라도르가 “두 얼굴의 사나이 같다”고 보도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백만 호 건설 등 멕시코 식 뉴딜 정책을 주장하는 중도좌파 포퓰리스트의 면모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집권하면 기업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친(親)기업 후보의 면모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 오브라도르는 부유세가 아니라 공무원 임금 삭감 등 재정 긴축을 통해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 PAN에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70년 동안 멕시코를 일당통치해 온 제도혁명당(PRI) 출신 인사들을 선거 캠프에 대거 끌어들이었다. 그 중에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체결했고 부패 스캔들 때문에 퇴임 후 외국으로 쫓겨났던 전직 대통령 카를로스 살리ナス 데 고르타리 집권기(1988~94년)의 정부 각료들도 있다.

또, 오브라도르의 선대위원장은 “우리를 차베스와 동일시하는 것은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 7월 3일치). 또 다른 측근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우리의 모델은 칠레의 미첼 바첼렛”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EZLN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오브라도르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고 비판했다.

멕시코의 소수 특권층이 오브라도르의 집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브라도르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멕시코의 진정한 사회개혁과 중요한 변화들은 기층 사회운동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올해 멕시코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상황전개가 있었다.

올해 초부터 사파티스타와 그 지지자들은 이른바 ‘다른 운동’을 벌여 왔다. ‘다른 운동’은 멕시코 헌법을 고치기 위한 제헌의회 소집 요구를 중심으로 반자본주의 좌파의 재편을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서로 다른 사회운동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새 조직을 출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또, 4월에는 철강 산업을 거의 마비시킨 강력한 파업이 벌어졌고, 5월 이후 교사 7만 명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해에 시작된 독립 노조 건설 움직임도 계속되는 등 노동운동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월과 5월에는 국경 너머 미국에서 대규모 이민자 권리 운동이 폭발해 멕시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오브라도르가 당선한다 해도 그의 통치보다는 바로 이런 미주 지역 대중 투쟁이 멕시코인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수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프랑스 운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아팍의 분열

1990년대의 우울한 시기에 새로운 저항 운동의 등장을 알려준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1998년 프랑스에서 아팍이 결성된 것이 그 중 하나였다.

아팍의 목적은 국제 금융 투기에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를 위한 주된 수단은 전 세계 투기 자본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아팍 지부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건설됐다. 특히 1999년 11월 시애틀 시위 이후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아팍 초대 의장인 베르나르 까쌍은 세계사회포럼을 주창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아팍 활동가들은 유럽사회포럼에도 활발히 참가했다.

아팍은 유럽연합 헌법이 유럽 대륙의 정치·경제 구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는 기도임을 선구적으로 지적한 공로도 있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성취다. 그 때문에, 지금 아팍이 분열하는 듯한 것은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6월 15~16일에 프랑스 렌에서 아팍 연례총회가 열렸고, 두 명의 후보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출마했다.

까쌍과 그의 가까운 동료이자 물러나는 아팍 의장인 자크 니코노프가 지지하는 후보와, 경제학자 수전 조지와 좌파 노조연맹인 솔리대르 조합원인 피에르 칼파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합했다.

까쌍과 니코노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한 후에 수전 조지와 그의 지지자들은 개표 과정에서 ‘변칙’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팍의 주요 기구들에 참가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전 조지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연례총회에서 나타난 분파주의와 난폭한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지지한 우리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니코노프 지지자들은 우리가 발언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반면에 자신들의 의장 후보에게는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분열은 꽤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 중 하나는 까쌍과 니코노프가 아팍을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었다. 까쌍은 아팍의 구조를 “비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평회원들이 운영위원회 소속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칼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니코노프가 아팍을 정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운동 전체를 하나의 정당처럼 운영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팍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지, 위계적 조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칠게 말해서 이번 분열은 좌우를 반영한다. 까쌍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차 유럽사회포럼이 이라크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대했고, 유럽 방위 정책에 모호한 지지를 보냈다. 지금 까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회포럼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기층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조직했다.

## 권위주의적

그러나 이 분열은 훨씬 더 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두 차례 큰 승리를 거뒀다. 2005년 5월 유럽헌법 패배와 2006년 봄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CPE 법 반대 운동이 그것이었다. 까쌍은 아팍이 “유럽헌법 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건설”한 것과 그 운동에서 아팍 지역위원회들이 한 ‘결정적 구실’을 찬양했다.

아팍 활동가들이 유럽헌법 반대 운동에서 한 긍정적 구실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 그리고 유럽헌법을 지지하는 당의 공식 정책을 반대한 일부 사회당 지도자들 같은 정치 조직들이었다.

아팍과 조제 보베의 농민연맹 등 비정당 운동들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이었던 1990년대 말과는 정치 지형이 달라진 것이다.

아팍의 두 분파와 프랑스 급진좌파 전체의 과제는 유럽헌법과 CPE 반대 운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행동 통일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프랑스 대선 관련 논의는 <맞불> 웹사이트에 실린 ‘프랑스 좌파의 대통령 선거 대안 논쟁’(http://www.counterfire.or.kr/20060703cr.htm)을 참고하십시오.

##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의 공격은 제3차 인티파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불〉 기자 김용민이 홍미정 교수(한국의 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를 만나 이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배경과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팔레스타인 전문가로 지난 2000년 2차 인티파다 당시 팔레스타인 현지에 있었고, 지난 1월 25일 치러진 팔레스타인 총선 때는 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했다.



“아시다시피,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안지역에서도 관리들과 의원들을 다 잡아갔다는 게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번

에는 당분간 이 상태가 멈출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돼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까지 원한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마스의 목표는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가운데 22퍼센트 정도의 지역에만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하마스과 하마스의 집권 배경에 대해서는 〈다함께〉 75호에 실렸던 ‘팔레스타인 저항과 하마스’(http://www.counterfire.or.kr/20060703pal.htm)를 참조하십시오.]

이런 목표를 내세우면서 하마스가 협상으로 가려고 하고,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도 여기에 동조하고, 또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재소자들도

동의를 하고 하면서 뭔가 협상으로 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려 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전 2003년에 합의된 [중동평화] 로드맵의 목표 자체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진지한 협상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내부에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거였어요. 자치정부 보안군이 이스라엘 대신 팔레스타인의 무장저항 세력을 진압·해체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자치정부 보안군에 자금과 무기를 대줘가면서요. 내전을 조장한 거죠.

이번에 하마스 정부가 구성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팔레스타인 내에 내전 같은 게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거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마흐무드 압바스의 파타와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사이에 어떤 합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가 이뤄지면서 뭔가 협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협상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안 싸워?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간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공격을 통해 상황 자체를 어지럽히고 초점을 흐리려는 겁니다.

## 새로운 인티파다의 시작

일단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산발적·국지적으로 벌어지던 시위가, 어제부터는 서안지역 전체와 예루살렘, 가자지구를 포함하는 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다시 민중봉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전 1차, 2차에

이은 3차 인티파다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7월 3일]도 그 쪽[팔레스타인] 활동가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지난 번[1차, 2차] 봉기 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격렬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도 오후 6시[현지시간]에 다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거라더군요.

이번 봉기가 과거 두 차례 봉기보다 훨씬 더 격렬할 수 있는 게, 사실 1차 [인티파다]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그래도 상황이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았다는 건데요. 그 때도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의 원조는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마스 정부 들어서면서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 들어오던 원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랍 부국들이 원조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봉기가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격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보다도 다른 아랍 정부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지도 않고 하마스 같은 이슬람주의 조직이 성장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들 나라의 반정부 세력 상당수가 이슬람주의 조직이거든요.

또, 이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배신한 대가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만 한다면, 이들 나라에 이슬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2차 인티파다 때도 요르단 정부는 자기 나라의 선거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이 커지면 이들 정부 역시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다’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재정적자의 진정한 원인이 부실 투자와 부족한 정부부담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조 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기금을 주식, 공적자금(2백조 원 이상), 호화골프장 건설 등에 투자해 왔다. 1998년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4천1백70억 원을 날렸다.

더구나 선진국의 정부부담금은 20퍼센트 이상(독일·대만은 전액 정부 부담)인데 비해 한국 정부는 8.5퍼센트밖에 부담하지 않는 것도 애써 감추려 한다.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과 재벌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도 정부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이 용돈 수준의

로 전락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령자가 됐을 때 연금수급자는 대상자의 40.8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라는 통계(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연금이 워낙 형편없다 보니 공무원연금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 하향평준화

하지만 하급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매달 급여의 8.5퍼센트나 되는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딱히 국민연금에 비해 낫다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 논리는 장차 국민연금 개악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신미정

##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행자부는 당선된 단체장들에게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서 파기와 노조 탄압을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얼마 전에는 ‘노조는 빨갱이이고, 첩자를 심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노사관계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것도 폭로됐다.

행자부는 ‘행자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무원노조 인정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악과 총액인건비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노조 탄압에 맞서며 사회공공성 확보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하자!